

여수박람회 유치전 1년 레이스 돌입

앞선 경제력·인지도 적극 활용을

지난 22일 마감된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신청에 한국(여수),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3개국이 접수를 마치고 개최국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경합에 들어갔다. 2012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1년간의 유치 레이스 대장전이 시작된 셈이다.

유치국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전남도, 유치위원회 등은 BIE(세계박람회 사무국) 회원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득표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내외적인 국내외 홍보활동 및 박람회 관련 SOC 확충에 나서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1차 유치교섭단을 지난 13일 중남미 지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BIE 회원국을 상대로 총력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했다.

엑스포 유치 1년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 모로코와 폴란드 등 유치를 신청한 3개 국가와 유치도시의 준비 상황과 강약점을 살펴본다.

한국은 201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개최 후보지인 여수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하고, 국

모로코, 阿·이슬람 문철팬 강력 맞수 폴란드, EU 지지·빠어난 풍광 강점

■2012 박람회 유치 신청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	모로코	폴란드
개최기간	2012. 5. 15~8. 12	2012. 6. 16~9. 16	2012. 6. 24~9. 24
개최도시	여수	탕헤르	브로츠와프
개최도시인구	32만명	55만명	70만명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세계의 길, 문화의 만남, 세계의 화합	세계 경제에서의 여가 문화
개최도시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지역 -우리나라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 남해안 관광 중심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여수국가산단 광안 경제자유구역 인접 등 경제, 물류의 중심지 -경제적으로 우세한 국가인 지도 -2010 엑스포 활동시의 경험과 지지국가를 중심으로 유치활동 전개	-모로코 북단 지브롤터해협 의 항구도시 -이국의 관광객 및 유럽으로의 위업이민자가 많고, 유럽 피사체가 자주 찾는 휴양지 -아프리카, 이슬람권 최초 신청국가 -수려한 풍광과 청정 환경	-오데르강독일 국경 주변항 경(12km, 130다리를 활용한 전시 교육 중심도시 이미지 부각) -자동차(폴보, 도요타 등)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구조와 EU 기술인수후보도시 -EU 기업 등 친서방 외교노선을 토대로 EU국기와 동구권 등 전통적 우방국임.

가적 차원의 유치활동에 나섰다. 아프리카·이슬람권 최초 유치라는 의미로 지난 모로코는 동남 지역의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대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폴란드도 유럽연합(EU)의 지지 아래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여수는 경제적으로 우세한 한국의 국가적 인지도와 2010 엑스포 유치활동 경험에 강점으로 꼽힌다. 여수국가산단·광안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물류의 중심인 데다

최근 정부가 주변지역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유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엑스포 주제를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으로 정한 여수지역 바다에 매년 적조가 발생하는 등 주변 해양 환경오염 문제가 부담이다. 개최지 주변 대규모 수산양식장의 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모로코의 탕헤르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름이 높다. 이같은 특성을 살려 주제도 '세계의 길, 문화의 만남, 세계의 화합'으로 정했다. 또 탕헤르는 주변 풍광이 아름답고 환경도 비교적 잘 보존된 곳으로 여수의 강력한 맞수다.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등이 모로코 지지를 위해 한 데 문철 경우 한국은 불꽃 튀는 외교전을 벌여야 한다.

이런 탕헤르의 지리적·문화적 강점으로 미뤄 여수의 가장 어려운 상대는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것이 일관된 분석이다.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는 12개의 섬과 130개의 다리가 어우러져 주변 풍경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발보와 도요타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는 등 산업구조가 다양하고 교육 여건도 우수한 지역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폴란드는 주제를 '세계 경제에서의 여가 문화'로 정했다.

따라서 여수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의 경제력을 심분 활용해 BIE 회원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엑스포 관계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차시장 “감사 지연 물의 빚어 심히 유감”

광주시-의회 갈등 일단락



박광태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와 관련 유감 표명을 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빚어진 광주시의회 파행 운영이 23일 박광태 광주시장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박 시장은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 거부와 관련, “의회를 경시하거나 거부하는 뜻은 조금도 없었으며 의원님에 대한 존경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감사지연 물의 빚어진 데 대해 시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유감’ 수준의 발언은 공식적 사과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대체로 수용하지는 분위기여서 의회는 일단 정상 운영되게 됐다.

하지만 이날 박 시장의 발언을 놓고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등 의회 내 갈등구조가 상존하는 상황이고 일부 의원들의 의회 의정단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날 “일부 간부들이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등 고통스런 심정을 털어놓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책임 하에 감사지연되더라도 의정에게 개선해주도록 건 의하고 오후부터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부들로부터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며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시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 의원들은 “사과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지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입장이다. 다른 의원들은 “시장이 여전히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순재홍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감사권에 대한 광주시의 본질적인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법률로 규정된 감사 거부에 직면했음에도 그 동안의 의정단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집행부의 2중대로 보이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위상 논란이 이는 것은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 구성에서 이미 예상된 일로 평가된다. 시의원들이 시장에게 정당한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하려 했다가도 당 내 비중을 생각하면 시장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전효숙 자진사퇴설’ 들은 바 없다”

김원내대표 “표결처리 장담 못해”...거취 싸고 여권 갈등 조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에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자진사퇴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고 열린우리당도 임명동의안의 표결처리 입장을 재확인, 전 후보자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설을 언론에 흘려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불쾌한 반응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전 후보자가 최근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우리가 확

인한 바로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없다”고 밝혔다. 윤태영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어제 한명숙 국무총리가 귀국보고를 한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오는 29일까지 협의한다고 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교착상태에 빠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의 기본 질서인 표결처리를 무시하고, 억지와 횡포에 무릎 꿇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방향과 관련 “기본적인 입장은 정상처리이며, 청와대가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물리력에 대한 돌파방안 등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표결처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당의 입장에 청와대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표결처리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기 보다 책임을 청와대로 떠넘기는데 급급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오는 30일 본회의 이후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유에 따라 당·정·각 격돌 등도 예상된다. 한편, 광주에 참가하고 있는 전 후보자는 인준안 처리에 대해 “정권과 청와대의 결정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문화산업 기반 확충·네트워크 구축 시급”

문화중심도시 성공 위한 2차 토론회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로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문화산업 기반과 관련 업체·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연속 토론회(제2차-문화산업을 통한 광주발전전략)’에서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신건석 창조산업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의 문화 산업기업체는 32개로 전국 대비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중심도시 법정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열린우리당 지방부의원 등 이지역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두번째 토론회로 오는 12월까지 총 4차례 열린다. 신 팀장은 문화산업 기업체의 90%, 매출액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광주는 문화산업 기업체 종사자가 전국 대비 2.1%(3천300명), 문화산업 매출액이 전국 대비 1.7%(약 3천300억원)에 불과하는 등 문화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는 문화산업 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관련 업체간 집적화는 물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크가 미흡해 우수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약소함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중심도시 추진과정을 기반조성기(2004~2010년), 정착기(2011~2015년), 도약기(2016년 이후)로 나누고 현 단계에서는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이나 광주·전남의 전통문화 등을 이용한 특색과 브랜드 개발 같은 콘텐츠 기획 및 창작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SONY

소니 광주전시장 새단장 사은행사

SD(DVD) < HD < 이면 Full HD(초고속화질)시대

소니 Full HD(초고속화질) 브라비아 X시리즈 출시!!

최신 출시된 소니의 평평함

소니의 첫 번째 DSLR
-1800만 CCD 화상 센서
-신개발 1000만 화소 탑재

BRAVIA X

광주전시장 | 신 광주전시장 062-532-3000
신 광주전시장 062-514-3000

귀 덕의 자녀도 무조건 100점! 자신(自信) 있습니다!

중학 IBT 토를 종합반
초·중 영어/수학 100점반
매일 2시간 영어/수학 통합반 토를 중!

062-222-6253

동아의국어학원

메가퍼스트학원